

2015년 4월 18일 시행 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사책형)

KG Passone / 7급, 9급 행정학 전임 / 행정학 박사 김만식 교수
해설강의 : 2015. 4. 20(월). 09:00~10:00 해설특강

총 평

수험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KG Passone 공무원학원 / 7급 · 9급 행정학 전임교수 행정학 박사 김만식입니다.

이번 9급 국가직‘행정학개론’ 시험문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학개론”에서 적정한 수준의 문제로 출제
2. 행정학개론 과목을 ‘쉽게 이해’하며 학습한 수험생은 합격점수인 90점을 무난하게 득점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문제 난이도
3. 문제의 난이도와 유형이 지난 2014년 국가직 출제문제와 유사
4. 행정학개론 시험문제가 적절하게 출제됨으로써 10정도에 20문항을 모두 풀고, 남은 시간 10분정도를 ‘영어 문제’푸는데 활용함으로써 필기시험 합격에 지대한 공헌
5. ‘이론과 법령’분포(총20문항) : ‘행정학이론 16문항’, ‘한국의 행정법령 4문항’
6. 단원별 출제분포 : ‘행정이론 및 기타(6문항 30점), 정책론(4문항 20점), 조직론(3문항 15점), 인사행정론(3문항 15점), 재무행정론(3문항 15점), 지방행정론(1문항 5점)’분포

※ 행정이론과 정책론의 출제비중 높음

2015년 4월 18일 시행한 9급 공무원 국가직 「행정학개론」 시험문제 출제수준은 다음에 실시되는 6월 서울시 지방직 및 전국통합 지방직 시험에서도 비슷한 출제수준과 출제유형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 국가직 시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을 위하여 마지막 시험까지 집중하여 전과목 총정리를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수험생 여러분에게 당부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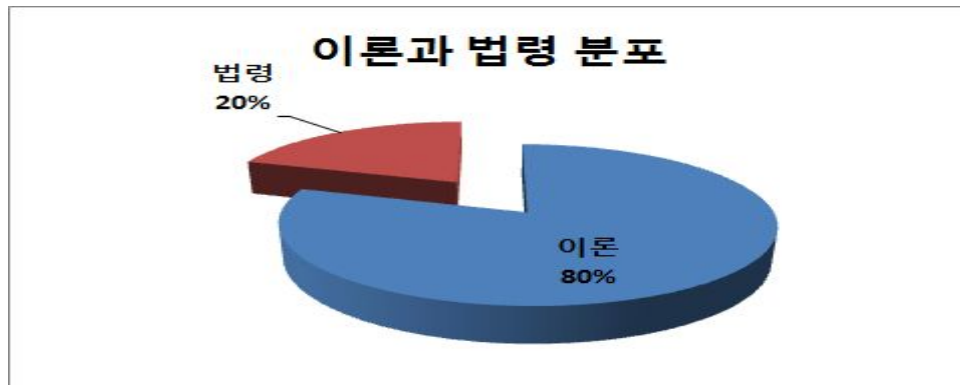
2015. 4. 18. 인사혁신처 시행 9급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출제문제 분석 (사책형)

1. 이론과 행정법령(한국의 행정) 출제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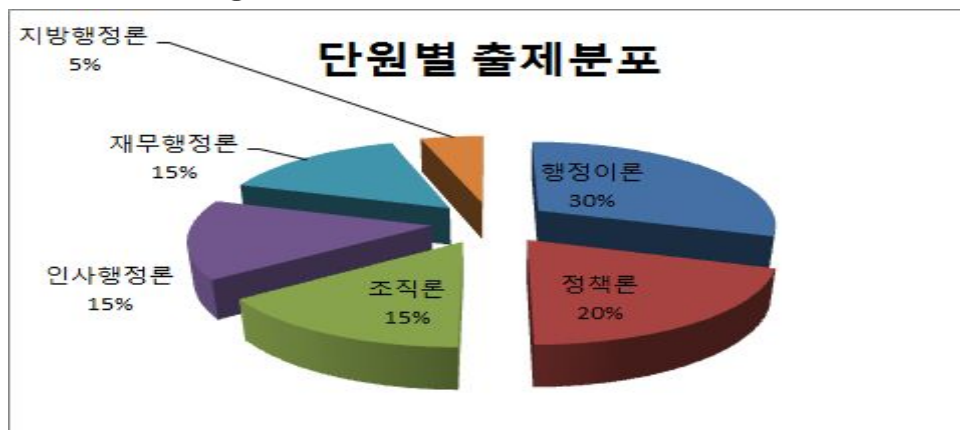
- (1) 행정학 이론[16문항 80점]
(2) 한국의 행정법령[4문항 20점 - 12번, 14번, 17번, 19번]

12번 국가공무원법, 14번 국가재정법, 17번 국가공무원법,
19번 국가정보화기본법



2. 분야별 출제 분포

- (1) 행정이론 및 전자정부, 행정개혁 [6문항 30점]: 행정학접근방법(9번), 행정이론(10번), 민간위탁(11번),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한 방법(18번), 정보화와 전자정부(19번), 행정개혁의 접근방법(20번)
(2) 정책론[4문항 20점]: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1번), 엘리슨의 정책결정모형(4번), 정책오류(5번), 정책결정의 회사모형(16번),
(3) 조직론[3문항 15점]: 특별지방행정기관(2번), 네트워크 조직(6번), 유기적 조직의 특징(7번)
(4) 인사행정론[3문항 15점]: 직무평가(3번),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직권면직(12번),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전직과 전보(17번)
(5) 재무행정론[3문항 15점]: 우리나라 예산과정(13번), 예비타당성 조사(14번), 균형성과표(15번)
(6) 지방행정론[1문항 5점]: 기관위임사무(8번)



문 1. 다음 중 어떠한 정책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경우는?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정책문제의 해결가능성이 높은 경우
- ② 이해관계자의 분포가 넓고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
- ③ 선례가 있어 관례화(routinized)된 경우
- ④ 정책의제화를 요구하는 집단의 규모가 큰 경우

★ 2015년 시험대비 9급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114-115.

정답 ▶ ②

[해설] ①, ③, ④는 어떠한 정책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이고, ②는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경우이다.

문 2.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관할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기 때문에 책임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 ② 출입국관리, 공정거래, 근로조건 등 국가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③ 현장의 정보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거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 ④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설치한 일선행정기관으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 2015년 시험대비 9급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570, 577, 1141.

★ 2015년 1월 Point 행정학 한국의 행정법령 특강_ 1회 주제 16번, 37쪽

정답 ▶ ①

[해설]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행정통제와 행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제도·주민소환제도·주민소송제도·주민발의제도를 보완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국가기관이므로 지역주민들의 통제가 어렵다. 국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하며, 새로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 5.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확보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그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ㄱ.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 ㄴ. 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제 자체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는 경우
- ㄷ.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제3종 오류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ㄴ
③	ㄴ	ㄱ	ㄷ
④	ㄷ	ㄱ	ㄴ

★ 2015년 시험대비 9급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419-420.

정답 ▶ ④

[해설] <제1종 오류>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

- ① 프로그램(정책)의 영향이 없는데 영향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오류
- ② 실제로 모집단의 특성이 영가설(귀무가설)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는 경우의 오류
- ③ α오류

<제2종 오류>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

- ① 프로그램(정책)의 영향이 있었는데 영향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오류
- ② 실제로 모집단의 특성이 영가설(귀무가설)과 같지 않은데도 그 가설을 채택하는 경우의 오류
- ③ β오류

<제3종 오류> ‘정책문제의 정의’를 잘못하여 생긴 오류는 근본적인 것이고 매우 심각한 것 → ‘메타 오류(meta error)’ 또는 ‘제3종 오류(type III error)’ → 공식적으로 정의된 문제가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지칭 →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문제가 문제의 핵심내용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여 초래되는 오류

문 9.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법률적·제도론적 접근방법은 공식적 제도나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도 이면에 존재하는 행정의 동태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 ②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후진국의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행정의 보편적 이론보다는 중범위이론의 구축에 자극을 주어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 ③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holism)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individualism)에 기반을 두고 있다.
- ④ 신공공관리론은 기업경영의 원리와 기법을 그대로 정부에 이식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2015년 시험대비 9급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75, 77, 96, 104.

정답 ▶ ④

[해설] ① 법률적·제도론적 접근방법은 공식적 제도나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도 이면에 존재하는 행정의 동태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②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후진국의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행정의 보편적 이론보다는 중범위이론의 구축에 자극을 주어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③ 경제학에 이론적 배경을 두고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론을 제도연구에 접목시킨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대표적인 이론 : 공공선택론)는 방법론적 개체주의(individualism)에, 제도의 범위를 관습과 문화를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holism)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론의 적용되는 범위에 따라 분류하면 신제도론은 일반이론과 소범위이론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중범위이론으로 분류하고 있다.

<참고> Agassi(1973)는 분석단위 또는 분석수준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방법론적 개인(개체)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와 방법론적 신비(전체)주의(methodological (w)holism)라고 하는 두 가지 대립되는 견해를 비교한다.

(1) **방법론적 개인(개체)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사회과학에서 사용하는 기술상의 용어에 있어서, 모든 크고 작은 사회현상(집단)의 속성은 개인(개체)의 속성과 속성들 간의 관계에 의해 구성(정의)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개체수준의 이론과 집단수준의 이론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집단수준의 이론들은 개체수준의 이론으로 환원(reduction)될 수 있고, 반대로 개체수준의 이론으로부터 모든 집단수준의 이론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는 오로지 개인만이 목적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개인들은 주어진 여건 내에서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행동하며, 사회구조는 개인들의 행위결과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2) 방법론적 신비(전체)주의(methodological (w)holism)

방법론적 전체주의에 의하면, 집단은 그 자체 수준의 독특한 속성이 있고 이러한 속성 중에는 개체(개인)의 속성으로는 정의될 수 없는 것이 있다. 크고 작은 사회집단들은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그것에 무엇인가 더해진 ‘전체(whole)’인 것이다. 이들 집단(사회)은 개인들의 목적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구조는 개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구속한다. 사회는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며, 사람들의 목적이 한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 의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 10.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행정관리론(사무관리론·조직관리론)에서는 계획과 집행을 분리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강조하였다.
- ② 신행정학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적실성 있는 정책의 수립을 강조하였다.
- ③ 뉴거버넌스론에서는 공공참여자의 활발한 의사소통, 수평적 합의, 네트워크 촉매자로서의 정부역할을 강조하였다.
- ④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시민을 주인이 아닌 고객의 관점으로 볼 것을 강조하였다.

★ 2015년 시험대비 9급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114-116.

정답 ▶ ④

[해설] 시민을 주인이 아닌 고객의 관점으로 볼 것을 강조한 이론은 ‘신공공관리론’이다. 신공공서비스는 거버넌스에 관한 시민 중심적·사회공동체 중심적·서비스 중심적 접근방법이다. 신공공서비스는 “이기적인 고객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갖고 공익을 중시하는 시민에게 봉사한다(Serve citizens, not customers).”

문 11. 최근 쓰레기 수거와 같이 전통적으로 정부의 고유영역으로 간주되어온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목적이라고 보기 힘든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행정의 효율성 향상
- ② 행정의 책임성 확보
- ③ 경쟁의 촉진
- ④ 작은 정부의 실현

★ 2015년 시험대비 9급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66, 69.

정답 ▶ ②

[해설] 민간위탁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하여 외부계약 방식을 통해 정부 기능의 시장성(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민영화의 한 형태)이다.

민간조직은 생산자, 정부는 생산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 공급결정자이다. 그러므로 민간위탁은 정부가 직접 공공서비스를 생산하여 국민에게 공급할 때보다 행정의 책임성 확보는 어렵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에 위탁해도 공공서비스 공급의 책임은 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만큼 공익의 관점에서 일정한 개입(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민간위탁의 문제점〉

- ㉠ 위탁대상 업무의 선정 시 구체적인 기준 모호
- ㉡ 수탁기관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감시체계 미흡
- ㉢ 수탁기관이 위임기관의 통제와 지도를 받아 수행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
- ㉣ 불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구제하는 절차 미흡

〈민간위탁의 긍정적 성과〉

- 행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절감(경제성)
- 신속한 업무처리와 업무량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효율적인 업무처리)
-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
- 전문기술과 지식의 활용
- 정부기구와 인력 및 예산의 감축과 간소화 등

문 12.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공무원이 인사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의 한 종류로서, 임용권자가 특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것이다.
- ④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2015년 시험대비 9급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891, 885, 883, 886.

★ 2015년 1월 Point 행정학 한국의 행정법령 특강_ 3회 주제 24번, 72-77쪽

정답 ▶ ③

[해설] 직권면직은 징계의 종류가 아니라 ‘징계이외의 불리한 처분’에 속한다.

국가공무원법[시행 2014.11.19.] [2014.11.19., 타법개정]

제70조(직권 면직)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삭제 <1991.5.31.>

2. 삭제 <1991.5.31.>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6.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7.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8.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과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문 13.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 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는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 ③ 예산안편성지침은 부처의 예산 편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필요는 없다.
- ④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 2015년 시험대비 9급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921-943.

★ 2015년 1월 Point 행정학 한국의 행정법령 특강_ 4회 주제 46, 47번, 121-138쪽

정답 ▶ ③

[해설] 국가재정법[시행 2015.1.1.] [2014.12.23., 타법개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5년에 편성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는 "3월 31일"을 "**4월 10일**")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문 14. 예비타당성 조사의 분석 내용을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으로 구분할 때, 경제성 분석에 해당하는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 ②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
- ③ 사업추진 의지
- ④ **민감도 분석**

★ 2015년 시험대비 9급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329, 932.

★ 2015년 시험대비 Point 행정학 2014. 10. 10(금). 아침무료특강 자료 p. 5-7.

★ 2015년 시험대비 Point 행정학 2015. 3. 13(금). 아침무료특강 자료 p. 5-6.

정답 ▶ ④

[해설] 민감도 분석은 모형에서의 파라미터가 불확실할 때 파라미터가 취하리라 생각되는 가능한 값들을 모두 고려하여 하나하나의 값들에 따라 정책대안의 결과가 각각 어떻게 되는가를 파악하려는 계량적 방법이다. 예를 들면 어떤 기간의 소비함수를 ' $C = aY + b$ '(C 는 개인소비지출, Y 는 가처분소득)라는 형태로 특정화하고 계측했다면 그 결과 얻어진 계수 a , b 의 값이 파라미터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기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

- 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다.
- ② **정보화 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외에 ★**기술성 분석**을 포함한다. 다만, 사업의 주요내용이 건설사업인 경우에는 기술성 분석을 수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제성 분석>★

- ① 경제성 분석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적 조사과정으로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분석한다.

② 비용-편익분석을 위해서 사업 시행에 따른 수요를 추정하여 편익을 산정하고, 총사업비와 해당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하여 비용을 산정한다.

○ 일반적으로 **B/C비율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함

③ 순수 R&D 사업, 기타 재정사업 등 비용-편익분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경제사회적·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기금사업 중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여 **수입증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경제성 분석 대신 **★★★수익성 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정책성 분석〉★

① 정책성 분석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및 사업준비 정도,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고용효과, 사업별 특수평가 항목 등의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② 정책성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환경적 가치의 고려가 필요하거나 저탄소·녹색성장 기여하는 바가 큰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특수평가 항목에 반영하여야 한다.

(예시: 환경적 가치 고려 사업) 국가·시도 지정문화재가 다수 분포하는 문화유적지나 갯벌·습지 등 생태적 중요성이 높은 지역의 보전 또는 친환경적 활용이나 관광을 촉진하는 사업 등

(예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사업) 환경오염 저감, 저탄소·에너지 효율개선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 녹색위 지정 10대 기술분야 사업 및 녹색기술인정 사업 등

③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정책성 분석 과정에서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분석** 및 민간투자 추진 가능성 검토 등을 위해 **재무성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④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정책성 분석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구체적 사업 목적,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수단인 **성과지표**(성과지표명, 측정산식, 측정방법 등)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지역 간 불균형 상태의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기술성 분석〉

기술성 분석은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분석한다.

〈종합평가〉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

문 15. 균형성과표(B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ㄱ. 조직의 비전과 목표, 전략으로부터 도출된 성과지표의 집합체이다.
- ㄴ. 재무지표 중심의 기존 성과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 ㄷ. 조직의 내부요소보다는 외부요소를 중시한다.
- ㄹ.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이라는 네 가지 관점 간의 균형을 중시한다.
- ㅁ. 성과관리의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한다.

- ① ㄱ, ㄴ, ㅁ
- ② ㄴ, ㄷ, ㄹ
- ③ ㄱ, ㄴ, ㄹ
- ④ ㄷ, ㄹ, ㅁ

★ 2015년 시험대비 9급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1053.

★ 2015년 4월 Point 행정학 9급 국가직 대비 마무리 특강_ 1회 주제 35, 36, 37번, 21-22쪽

정답 ▶ ③

[해설] <BSC의 세 가지 기능> : BSC는 추상성이 높은 비전에서부터 구체적인 성과지표로 이어지는 위계적인 체제(Niven, 2003)

- ㉠ 성과측정시스템
- ㉡ 전략관리시스템(전략목표, 성과지표, 목표 값, 실행계획으로 전환해 완성되는 전략관리 시스템)
- ㉢ 의사소통 도구(잘 개발된 BSC는 조직구성원들에게 조직의 전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성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

<BSC의 네 가지 균형>

- ㉠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 지표(고객, 학습과 성장, 내부 프로세스)의 균형
- ㉡ 조직의 내부 요소(직원과 내부 프로세스)와 외부 요소(재무적 투자자와 고객) 간 균형
- ㉢ 결과를 예측해주는 선행지표와 결과인 후행지표 간 균형
- ㉣ 단기적 관점(재무 관점)과 장기적 관점(학습과 성장 관점)의 균형

<BSC의 장점(특징)>

재무지표 중심의 기존의 성과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관점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다.

문 16. 정책결정모형 중에서 회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회사조직이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닌 구성원들의 연합체(coalition)라고 가정한다.
- ② 연합모형 또는 조직모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③ 조직이 환경에 대해 장기적으로 대응하고 환경 변화에 수동적으로 적응한다고 한다.
- ④ 문제를 여러 하위문제로 분해하고 이들을 하위조직에게 분담시킨다고 가정한다.

★ 2015년 시험대비 9급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381, 387.

정답 ▶ ③

[해설] Richard Cyert와 James G. March가 타협모형을 설명한 저서의 이름이 <회사에 관한 행태이론(A Behavioral Theory of the Firm)>이라는 사실 때문에 타협모형을 ‘회사모형’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다.

‘카네기 모형(Carnegie Model)’이라고도 부르는 연합모형(聯合模型, coalition model)은 타협모형의 일종이다. 연합모형을 ‘카네기 모형’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Carnegie-Mellon University)에서 활동한 Cyert, March, Simon 등 이른바 카네기 그룹(Carnegie group)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회사모형에서 주장하는 것은 회사조직이 장기 전략을 개발하기보다는 현실문제 해결에 급급하고, 다른 조직이나 환경과의 안정적인 관계유지를 통해서 자기 조직에게 도전적인 다른 조직의 행위를 규제한다는 것이다. 또한 회사조직은 돌발사태에 대비한 시나리오(차선책)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회사조직에서 정책결정자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장기적인 전략보다는 결과가 확실한 단기 전략을 중심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회사모형의 주장이다.

문 17.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공무원을 수직적으로 이동시키는 내부 임용의 방법으로는 전직과 전보가 있다.
- ②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③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 ④ 임용권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휴직을 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2015년 시험대비 9급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785.

★ 2015년 1월 Point 행정학 한국의 행정법령 특강_ 3회 주제 24번, 61-77쪽

정답▶ ①

[해설] ①번 : 전직, 전보, 파견근무, 겸임, 직무대행 등은 담당직위의 **수평적** 이동(동일 계급 내의 인사이동)에 해당된다.

②번 : 국가공무원법[시행 2014.11.19.] [2014.11.19., 타법개정]

제80조(징계의 효력)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번 : 국가공무원법[시행 2014.11.19.] [2014.11.19., 타법개정]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龜鑑)이 되는 자**
2.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3.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 할 때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④번 : 국가공무원법[시행 2014.11.19.] [2014.11.19., 타법개정]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삭제 <1978.12.5.>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문 18.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교정적 조세(피구세: Pigouvian tax)는 사회 전체적인 최적의 생산수준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의 양에 해당하는 만큼의 조세를 모든 생산물에 대해 부과하는 방법이다.
- ②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적으로 최적의 생산량을 생산하도록 유도한다.
- ③ 코우즈(R. Coase)는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 ④ 직접적 규제의 활용 사례로는 일정한 양의 오염허가서(pollution permits) 혹은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주체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식이 있다.

★ 2015년 시험대비 9급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37-38, 263-264.

★ 2015년 1월 Point 행정학 한국의 행정법령 특강_ 1회 (보충내용) 46쪽

★ 2015년 4월 Point 행정학 9급 국가직 대비 마무리 특강_ 1회 주제 1번, 2쪽

★ 2015년 시험대비 Point 행정학 2015. 2. 6(금). 아침무료특강 자료 p. 1-3.

정답 ▶ ④

[해설]

①번 : 외부불경제효과(負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외부불경제효과를 발생시키

는 생산물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면 이러한 생산물에 대한 생산과 소비를 억제할 수 있다.

②번 : 외부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적으로 최적의 생산량을 생산하도록 유도한다.

③번 :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란 공공의 공간에서는 도덕적 해이와 무관심 그리고 착취동기가 발생하여 ‘공유재산의 비극’이 발생하지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장소와 공간은 환경적으로 훨씬 더 잘 보호(보존)된다는 이론이다.

④번 : 일정한 양의 오염허가서(pollution permits) 혹은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주체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식은 직접적인 정부의 규제정책 수단(전통적인 명령통제적 규제정책수단)이 아니라 1990년대 이후에 등장한 비규제적 정책수단(시장유인적 기제)에 해당된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2013.3.23., 타법개정]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배출권"이란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정부는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제도(**배출권거래제**)를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할 것
2. 배출권거래제가 경제 부문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3.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 할 것**
4. 배출권의 거래가 일반적인 시장 거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게 정책을 운영할 것

문 19. 정보화와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정부3.0이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핵심가치들을 통해 국정과제를 해결하고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 ④ 스마트워크(smart work)란 영상회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유연한 근무 형태이다.

★ 2015년 시험대비 9급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125, 130, 191, 781.

★ 2015년 1월 Point 행정학 한국의 행정법령 특강
1회 주제 5번, 6-10쪽 / 주제 6번, 11-17쪽

★ 2015년 4월 3일(금) Point행정학 아침무료 특강 자료 p. 1-3.
★ 2015년 4월 10일(금) Point행정학 아침무료 특강 자료 p. 1-3.

정답 ▶ ②

[해설] ①번 : 전자정부법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앙사무관장기관(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행정기관 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5조(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번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문 20.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사업(산출)중심적 접근방법은 행정활동의 목표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려는 접근방법으로 분권화의 확대, 권한 재조정, 명령계통 수정 등에 관심을

찾는다.

② 과정적 접근방법은 행정체제의 과정 또는 일의 흐름을 개선하려는 접근방법이다.

③ 행태적 접근방법의 하나인 조직발전(OD : Organizational Development)은 의식적인 개입을 통해서 조직 전체의 임무수행을 효율화하려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개혁활동이다.

④ 문화론적 접근방법은 행정문화를 개혁함으로써 행정체제의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혁을 성취하려는 접근방법이다.

★ 2015년 시험대비 9급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1258-1259.

정답 ▶ ①

[해설] 분권화의 확대, 권한 재조정, 명령계통 수정 등에 관심을 갖는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은 전통적 조직이론에 입각하여 주로 공식조직 내부구조의 개선과 합리화에 중점을 두는 조직 구조적 접근방법이다.

2015년 대비 7급, 9급(공통) 5월 특강 일정

1. 한국의 행정법령 특강 : 2015년 5월 1일(금) 14:00~개강
[5월 1일~5월 9일 / 금, 토 : 14:00~17:50 / 주2회, 총4회, 16시간 완성]

2. 지방행정(지방자치론) 특강 : 2015년 5월 15일(금) 14:00~개강
[5월15일~5월29일/ 금, 토 : 14:00~17:50 / 주2회, 총5회, 20시간 완성]

서울시 지방직 및 전국 통합 지방직 대비 실전동형모의고사 4월 ~5월 특강

2015. 4. 25(토). 09:00~13:00 개강

9급 서울시 & [통합] 지방직 행정학개론 출제 전범위

1주 1회 4시간, 토요일 09:00~13:00

총6회 총24시간 총24회 모의고사 _ 총480문항

6주 완성